

중국, 내년에도 확대재정정책 실시

1. 개요

□ 지난 11월 하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확대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함.

- 확대 재정정책의 내용은 ▲국채 발행 지속, ▲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비용 확대, ▲감세 정책 실시, ▲재정 지출구조 합리화 등임.

2. 내년도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내용

□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: 수량, 항목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, 주민 소득 특히 농민의 소득 증대 및 농업발전 투자 항목을 늘림.

- 기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도 논의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지속된 재정개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의 감세 정책은 가능하다고 판단함.

□ 내년도 (추가)국채발행액을 금년과 비슷한 1,500억 수준으로 설정하되,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항목을 조정할 것임.

- 첫째, 일부 인프라 투자 자금을 시장성 및 잠재력이 있는 제조업에 투자하는 한편, 설비·장치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도 확대하여 중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.

- 둘째, 농업 및 3차 산업 투자를 확대할 방침인바, 특히 농촌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신규 국채발행 자금을 농촌지역의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, 3차 산업 특히 정보화 사업 투자를 늘림.
- 셋째, 국채 할인 범위를 확대함: ▲기술개발 할인혜택 범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, ▲중소기업 및 1, 3차 산업으로 확대, ▲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인프라 투자에도 대출할인 혜택을 줌.
- 그밖에 ▲국채발행 자금의 지방정부 사용비율 확대 추진, ▲서부의 낙후된 지역의 공업기지 건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, ▲동부지역 기업의 서부지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자금 확충 등도 모색하고 있음.

□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성 지출을 늘려 정치, 사회적 불안요인을 방지함.

- 첫째, 당초 예상되었던 공무원 및 국영업체 종사자의 내년도 임금인상이 저소득층과의 소득격차 문제로 보류될 가능성이 있음.
- 둘째, 사회보장대상자를 확대함. 현재 도시지역의 빈곤인구는 1,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약 1,000만 명이 아무런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.

□ 농촌에 대한 대출 확대와 감세 정책으로 농촌 소득의 증대를 유도함.

- 첫째, 농산품 가격보호제도를 마련하여 농촌 소득 지지
- 둘째, 기업농 육성을 위해 대출우대정책을 실시
- 셋째, 비료, 농약 등 생산재 구입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
- 넷째, 농촌의 교육시설, 교사급여, 농민의 생활비 일부 등을 보조
- 다섯째, 곡물을 포함한 농산품의 수매가격을 인상함. 지난 1997~2000년 동안 농부산물 수매가격은 25.7% 하락하였으며, 곡물 수매가격은 31.4% 떨어짐.

□ 세제 개혁을 통해 내수경기 부양을 시도함.

- 증치세를 생산자 부담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하여 세원을 명확히 하고, 기업의 투자 적극성을 유도함.
- o 현재와 같이 생산품 가공단계마다 기업이 증치세를 납부할 경우, 계속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, 고정자산 구입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.
-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도 정비하여 환급 대신 수출기업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도 고려중임.
- 현재의 개인의 연간 최저 과세 소득은 1980년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연 800원에 불과함.
- o 개인소득세의 60%는 직장 근로자들이 납부하고 있는바, 최저 소득을 1,200~1,500원으로 높이고, 소득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중임.
- o 전체 소득의 80%를 차지하는 상위 20%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하여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도록 함.
- 자동차,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 부과되던 소비세(약 10%)를 폐지할 예정임.
- 주택, 자동차, 통신, 가전제품 등 고가제품 구입시 개인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검토중임.
- 농민에 대해서는 첫째, 3년 내 일부 농업세를 감면하고, 둘째, 수수료 폐지 시범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, 셋째, 은행예금액이 5,000원 이하인 개인에 대해 이자세를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중임.

3. 평가 및 시사점

- ☐ 그 동안 확대 재정정책은 중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, 내년에도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- 지난 1998년 이후 중국정부가 발행한 장기국채는 총 5,100억 원에 달하며, 총

국채 투자 항목은 8,600건, 투자 총액은 2조 4,000억 원, 작년까지 완결된 투자액은 전체 투자액의 63%에 달하는 1조 5,000억 원이며, 내년까지 완결될 투자금액은 90%에 달함.

- 국채 발행 투자는 ▲기업의 기술개발 지원, ▲서부대개발 투자 확대, ▲외국인 투자 부족 보충, ▲내수 진작, ▲고용 창출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함.
- o 지금까지 국채발행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998년 1.5%포인트, 1999년 2%포인트, 2000년 1.7%포인트, 금년 1.67%포인트에 달함.

□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확대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.

- 국채 발행이 ▲국유기업 편중 심화, ▲프로젝트 시행자인 기업과 지방정부간의 협력 부재, ▲정부의 행정 간섭 등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음. 또한 재정의 국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, 정부 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수요가 부족한 상태임.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증권업에 대한 WTO 개방 프로그램 발표

- 중국증감위가 증권업에 대한 WTO 개방 프로그램을 발표함.
 - ① 외국증권사의 B주 거래허용
 - ② 외국증권사 중국 대표처의 중국 증권거래소 특별 회원 자격 취득
 - ③ 중외합작의 투자펀드를 허용(단, 외자비율은 33%를 넘을 수 없고, 가입후 3년까지 49%로 제한)
 - ④ 가입후 3년 내 각종 주식 및 채권의 위탁 판매와 거래가 가능한 합작투자회사 설립 가능(단, 외자비율 1/3 이내로 제한)
- 이미 위의 ①, ②에 관한 신청은 증권거래소가 접수하기 시작했고 ③, ④에 대해서도 조만간 접수할 예정임. (經濟日報, 2001. 12. 12)

2. 내년도 평균관세율 12%로 인하

- 2002년 1월 1일부터 WTO 가입을 위해 약속한 2002년 관세인하 의무에 따라 평균관세율을 현재의 15.3%에서 12%로 인하함.
 - 전체 품목의 73%에 해당하는 5,300여 개 항목의 세율을 인하함.
 - 각 품목별 관세율은 공산품 11.6%, 농산품 15.8%, 수산물 14.3%, 원유 및 완제품 6.1%, 목재, 종이 및 그 제품 8.9%, 방직품과 의류 17.6%, 화공제품 7.9%, 교통 공구 17.4%, 기계 제품 9.6%, 전자제품 10.7% 등임.
 - 밀, 식용유, 설탕 등 농산품 10종과 요소비료를 포함한 화학비료 3종에 대해서는 관세율쿼터제를 실시함.
- 한편, 방콕협정 회원국인 한국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수입하는 700여 종 제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규정한 최혜국관세율보다 낮은 우대관세를 보장함. (經濟日報, 2002. 12. 12)